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4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3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김석기 · 장제원
한무경 · 서병수 · 윤두현
김영식 · 하태경 · 최춘식
태영호 · 조수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열람 제한 신청을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했더라도 이해관계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

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그 부모, 형제 등 직계가족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해자가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열람을 허용하게 되면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.

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·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. 또한 이해관계 등을 내세우더라도,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의 발급

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9조제6항, 제29조제8항 신설).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6항 중 “제2항제5호”를 “제2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”로, “세대원”을 “세대원 및 직계존비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 ~ ⑤ (생략)	제29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(이하 이 조에서 “가정폭력피해자”라 한다)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<u>제2항제5호</u>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<u>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.</u>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세대원 및 직계존비속</u> ----- -----.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</u>

<u>⑧</u> · <u>⑨</u> (생략)	<u>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<u>⑨</u> · <u>⑩</u> (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